

진보 교육감 당선... 교육개혁 탄력받나

“남북·북미대화 땀 한미훈련 중단 검토”

문 대통령, NSC전체회의 주제... “비핵화 속도 기대”

당선자들, 깜깜이 선거 우려 깨고 접전 끝 승리

광주, 3선 거부감 해소·교육시민단체 갈등 봉합

전남, 학교·교실 중심 교육정책 추진·개혁조절

■ ‘전교조 출신’ 광주·전남교육 과제와 전망

깜깜이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광주·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초접전 끝에 장휘국·장석웅 후보가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을 선택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지한 것이다.

장휘국광주교육감은 38.0%를 득표해 35.8%를 얻은 이정선 후보를 단 2.2%포인트(1만4,747표) 근소한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은 장 교육감을 선택하지 않은 셈

이다. 유권자들은 3선에 대한 거부감과 장 교육감의 민선 1·2기를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3선 거부감’은 장 교육감 지지세력의 관료화, 인사불만 누적, 사학재단과의 갈등에 따른 정치력 부재, 실력저하, 청렴도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장 교육감의 3선은 민선 2기 대표공약인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40세대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교육감은 14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자들이 3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실력저하, 청렴도 문제가 결부되면서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며 “이슈가 된 실력저하와 청렴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선 교육감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장 교육감의 지지기반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될 전망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38.4%를 획득해 34.2%를 득표한 고석규 후보를 4.2%포인트(4만2,514표)차로 가까스로 따돌렸다.

장 당선자는 전남의 첫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장 당선자가

고 후보의 ‘문재인 마케팅’에 부딪혀 지지율 상승이 주춤했다. 여기에 전교조 전 국회의원장 이력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장 당선자 취임으로 전남 교육행정의 일대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남도 민교육협치위원회 설치 운영,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학생자치 실현, 교직원 업무경감을 실현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 당선자는 학교살리기와 교실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직적 학교 문화 탈피와 성과 중심주의 행정개선, 수업 방식과 평가혁신 등 교실·학교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황애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문제를 거론하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있는 완전



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된 회담에까지 합의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합의행동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기 기대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별비 뇌물·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내달 20일 선고 예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료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약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 심리료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선거개입은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두 사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당선 인사 14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여당 ‘압승’ 야권 ‘침몰’ ... 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민주 8월 전대 앞두고 ‘빅텐트·연대론·빅딜설’

6·13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 여당 싹쓸이와 야권의 침몰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역정계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의 동반 참패를 두는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정계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21명(72.4%)을 배출했다. 광주에서는 모든 자리를 싹쓸이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 3곳에서 승리하며, 가까스로 체면과 명분은 살렸다.

그러나 지방의회 성적표는 극과 극이다. 액면 그대로 ‘민주당 천하’다.

광역의원 81명(광주 23, 전남 58, 비례 포함) 중 76명(93.8%)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광주시의회는 23석 중 22석, 전남도의회는 58석 중 54석이 여당의원들이다. 야권은 광주는 정의당 비례대표 1석, 전남은 평화당 지역구 1석, 비례 1석, 정의당 지역구 1석, 비례 1석 등이

다. 야권 5명 중 지역구는 2명 뿐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은 광주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전남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전무하다.

기초의원도 민주당 일색이다. 5개구 기초 비례 9석은 민주당이 독차지했다. 광주에서는 평화당이 20여명을 출전시켰으나 9명만 당선됐고, 바른미래당은 전략적인 동구와 광산구에 집중했지만 당선자가 없어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당은 광주에서 최대 10명 당선을 목표했지만 광산구에서 단 1석만 건지는데 만족해야 했고, 민주당도 광주에서 23명을 출전시켜 3명만 생존했고, 전남에서도 당선인이 4명에 불과했다. 광주만 놓고 보면, 현재 9명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3~4인 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정계진출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로 드러났다. 민주당 몰표로 3인 선거구에서도 3명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단재당, 지방의원 모두 민주당이 압승

하면서, 중앙발 정계개편과 맞물려 지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 지형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130석으로 몸집이 커진 반면 야당 자유한국당은 체중이 줄고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호남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세력이 약화되면서 당 대당 통합이나 개별당, 여권성향 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연대설, 무소속 후보까지 흡수하는 빅텐트론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의원들 역시 소속 정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행보를 같이할 공간이 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모종의 정치적 빅딜이나 리모텔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석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면 2년 뒤 총선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빅텐트를 칠 수 있고, 지역정계도 그에 맞춰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김종식·최형식 ‘4선’ 진기록

이동진 ‘3선 연임’ ... 장휘국 시교육감도 3선 성공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과 최형식 담양군수 당선인이 자치단체장에서는 보기 드문 ‘4선’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99.92% 개표율을 보이는 현재 김종식 당선인이 5만6,284표(47.75%)를 얻어 평화당 박홍률 후보를 292표 차로 간신히 눌렀다.

김 당선인은 민선 3~5기 3선 완도군수를 역임한 뒤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거쳐 이번 선거에는 시·군 경계를 넘어 목포시장에 당선돼 4번째 기초단체장직을 거머쥐게 됐다.

민주당 최형식 당선인은 담양군수로만 4선을 하게 됐다.

최 당선인은 득표율 46.55%를 기록, 무소속 전정철 후보(40.97%) 등 경쟁후보 4명을 제쳤다.

최 당선인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에 당선됐지만 2006년 재선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2010년, 2014년 당선돼 이번이 3선 연임이자 누적 4선 도전이었다.

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당선인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현직 단체장이 대거



김종식 최형식

탈락한 민주당 경선 관문을 통과해 정당 지지율과 현역 프리미엄을 동시에 등에 업고 당선됐다.

무소속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은 무소속으로만 연임이자 누적 3선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민선 4기 장성군수 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했다가 민선 6~7기 군수직을 수행하게 됐다.

무소속 고길호 신안군수 후보는 누적 3선에 도전했지만 2.14% 포인트 차로 무소속 박우량 당선인에게 패했다.

무소속 전경태 구례군수 후보도 누적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이정선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정근산 기자

제6회 신안천일염

전국대학생바둑대회

- 참가자격: 전국 대학바둑학과, 바둑동아리 소속대학생
- 일시: 7월 20일(금)~21일(토) • 장소: 신안군 이세돌 바둑기념관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승단과 승급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제7회 신안천일염 초·중·고

학생 바둑 대회

- 참가자격: 광주·전남 초·중·고 재학생
- 일시: 2018년 9월 8일(토) • 장소: 문성중·고 체육관